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김명섭(Myongsob KIM)

1953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은 정전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인접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과도 직결된 이 정전체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연구는 1950년에 시작된 6.25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과 그 결과로 1953년에 탄생한 정전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전쟁을 멈추기 위해 시작된 정전협상은 왜 2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일까? 그 결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역사정치학적 연구이다. 역사정치학이란 정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정치학이다. 그것은 역사학과 정치학의 융합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를 분리시켜보려는 학문이다. 역사정치학적으로 볼 때, 수많은 역사는 정치적으로 오용되거나 악용되어 왔다. 6.25전쟁의 역사는 특히 그러했다.

6.25전쟁의 역사는 공산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 등에 의해 정치화되었다. 6.25전쟁 자체도 정치화된 관념의 충돌이었고, 그러한 관념의 차이가 정전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전과 정전협상 시작 당시 서머타임 실시여부에 따라 쌍방 간에 존재했던 1시간의 시간 차이, 한국이라는 명칭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지니는 관념적 내포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념의 차이들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관념의 차이와 함께 양 진영간의 정전협상을 지체시켰다.

이 책은 먼저 정전협상의 막전막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관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행태의 차이가 어떻게 정전협상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 인간군상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의 재획정, 즉 38선이라는 직선의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곡선의 경계선으로 대체된 지정학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어서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정전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왜 6.25전쟁이 ‘포로전쟁’적 모습을 보이면서 지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은 약 일주일 후인 1953년 8월 8일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쌍생아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라는 냉전체제의 하위구조로서 1953년에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공산주의의 전쟁 재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복진통일 의지까지를 겨냥한 3중 봉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김명섭(金明燮)은 1996년 파리1-팡테옹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한신대 국제학부장, 연세대 통일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 국제학술지 *Geopolitics* 편집위원, 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2018-)이다.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 필진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이래 한국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역사정치학 및 지정학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